

금타 화재의 비극, 24세 청년 하반신 마비... “사과없더라”

“만 24세인 아들은 화재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호타이어(금타) 광주공장 화재로 대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가족은 사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부상을 입은 A(24)씨의 가족 B씨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확한 사고 경위 공개,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군대를 다녀온 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취업해 3년째 일을 하고 있다. 정련반에서 타이어에 들어갈 고무를 반죽하는 공정을 맡았다.

사고 당일에는 고대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한 화재 연기를 피해 대피하던 중 지붕 쪽에서 추락해 흉추·요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12번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사고 6일이 지났지만 사측의 책임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B씨는 “회사 측은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사과나 진상 설명도 없이 산재 처리만 진행한 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상황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로 대피중 지붕서 추락 고무 반죽 담당 20대 노동자, ‘다발성 골절상’ 가족들 “사고 열새째 책임자 직접 사과 없어” “화재 예방 시설도 문제... 재발 방지책 마련을”

또 “노조 관계자와 회사 안전 과장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며 “부상자가 한 명이라 사

고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봐가 난다”고 했다. 그는 미흡한 화재 예방 시설에 대해서

도 불만을 터뜨렸다. B씨는 “함께 일하는 직원은 화재 당시 방화문이 고장 나고 밖으로 대피하는 완강기 시설이 없다고 했다”며 “오래된 건물이라 화재 예방 시설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단지 한 명의 직원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자, 청춘을 시작하려던 청년이었다”며 “사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명확한 사고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

‘공장 화재’ 금호타이어 “불 난 설비 매달 점검”

공장 화재로 주요 공정의 큰 피해를 입은 금호타이어가 화재 당시 알림 방송 부재, 공장설비 노후화에 따른 화재 가능성 등 일각의 의혹에 반박했다.

금호타이어는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면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 김용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 성용태 노사협력담당상무, 김옥조 커뮤니케이션팀 상무가 참여했다.

브리핑을 연 금호타이어는 화재 과정에서 제기된 일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간 공장 화재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화, 방화벽 미작동, 사내 화재 알림 방송 부재 등 의혹들이 제기됐다. 사측이 화재나 재난 예방 시스템·인프라 확충에 소홀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개요에 대해 “화재 당시 공장에는 전체 500여 명이 근무 중이었고 34명이 불이 난 (정련) 공정에 일하고 있었다”며 “(정련 공정의) 산업용 오븐에서 이물(이물질)이 날아 났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직후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발사됐으나 꺼지지 않아 수동으로 약제를 분사했다. 그럼에도 불이 꺼지지 않자 소방 당국을 불렀으며 물 분사에 매연이 많아지자 인원을 대피 시키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사내 방송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이 난 직후 방재 센터로 연락을 했으며, 방재센터 직원이 매연이 가득한 현장을 확인하자 ‘빨리 이탈하라’며 3번 방송했다. 사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 방송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오븐 등 설비가 노후화돼 불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방관리자나 설비·현장 사원, 방재센터, 공급자제 등 분야 담당자 12명이 매달 예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에도 점검 결과 문제는 없었다”며 “원료가 되는 고무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불을 낸) 이물의 혼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화문이 정상 작동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방 브리핑 당시에는 정상 작동했다고 밝힌 것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것은 감식을 통해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 끝을 흐렸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해 머리과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는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공장 인근 아파트 4곳 주민 249명이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대피했다가 19일 오전 집으로 돌아왔다. /송현근 기자

소방청,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 합동조사단 구성

원인조사 착수... 내달 20일까지 발화 원인 및 피해 경로 등 조사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다음달 20일까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화재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최초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

학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기계의 작동 상태를 분석하고 연소 확대 경로와 피해 범위 등을 들여다본다. 그 외에 방화 가능성이나 관리 소홀 여부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도 수행한다. 조사단은 화재 피해와 더불어 유해 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해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권철 기자

“전두환 기념 공원 철폐하라” 광주시민 등 4420명 서명

전두환 고향 경남 함천에 세워진 전두환 기념공원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현장 서명에 광주시민 등 4420명이 동참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지난 17일부터 정부기념식 당일인 18일까지 이를 동안 재단이 진행했던 ‘전두환 잔재 청산 법안 마련 촉구 현장 서명’ 결과 광주시민 등 4420명이 동의했다.

재단은 당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합천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와 현장 서명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운동본부가 추진한 일해공원 명칭 변경 국회 청원이 동의 수 10만 명을 넘기면서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국회가 오는 12월31일까지 답변을 미루면서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이다.

재단과 운동본부는 서명 운동을 통해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넘어서, 전두환의 잔재 청산과 내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 기념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과 운동본부는 온라인을 통해 같은 서명을 받는 동시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합천 지역 여론을 돌릴 방침이다. 고통의 운동본부 간사는 “국회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국회는 늘 그래왔듯 답변을 미루고 또 적당히 폐기할 것이 분명하다. 내란수괴 등 범죄자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기념물 설치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빈곤한 민주주의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 내란의 역사 탓이다. 아픈 역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한 비상계엄 등 민주주의를 뒤엎는 사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 현장 중심 지원

현장체험학습 등 23개 학교업무 지원청으로 이관

전남교육청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재구조화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업무를 적극 분담하고, 학교는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운영돼 온 현행 구조를 과감하게 재 정비, 실질적 업무 경감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진행된 학교행정 업무경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23개 행정업무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는 학교현장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학교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특별교실 정비, 교과서 배부 등이다.

해당 과제들은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행정력 소모가 컸던 업무들이지만 교육지원청이 적극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로 정비한다. 시·무안군 지역에는 센터 내 지원팀이 추가 설치되며, 장흥·강진·함평에는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72명의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배치, 학교 지원체계를 탄탄히 할 계획이다.

분청도 업무·인력·조직 체계를 재구조화한다. 업무 연계성을 중심으로 2개과와 2개팀을 통합·폐지하고, 조정된 인원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된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